

2023. 2. 24

공정거래실천모임, 서울대 경쟁법센터,  
고려대 ICR센터,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

# 2023년 공정거래 정책방향

## 공정거래위원장 한 기 정



# 공정경쟁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



## 경쟁촉진

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 
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

-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제한 완화
- 카세어링 영업구역제한 완화
- 특수관계인 제도 정비



## 엄정한 법집행

담합 · 불공정행위  
엄중제재

- 철근 입찰담합 (과징금 2,565억)
- 타이어 분야 부당지원 (과징금 80억)
- 앱마켓 과다수수료 시정



## 공정거래 기반강화

납품대금 연동 확산  
불공정 하도급 시정

- 납품단가 연동 자율운영 (388개사)
- PB상품 불공정하도급 (과징금 243억)
- 기술탈취 시정 (10건)



## 소비자 보호

소비자 권익침해 시정  
제도개선 권고

- OTT 청약철회 방해 시정
- 골프장, 숙박사 불공정약관 시정
- 영유아 카시트 안전기준 강화

# 디지털 경제 대응 및 시장의 공정성 제고

## 경제구조



###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

-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, 비대면 거래 지속
- 독과점 남용으로 혁신동력 저하 우려
- 온라인 눈속임 상술 증가

## 기업·민생



### 저성장으로 기업·민생 어려움 가중

- 저성장으로 경제 역동성 저하
-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,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기업, 소상공인 부담 가중

## 법집행



### 높아진 국민과 시장의 눈높이

- 조사·심의 과정에서의 철저적 권리 보장
-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 요구 증가



# 원칙이 바로 선 **공정한 시장경제** 조성

**01**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 
시장환경 조성



**02** 중소기업, 소상공인  
공정거래기반 강화



**03** 대기업집단 제도의  
합리적 운영



**04**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 
거래환경 조성



##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 시스템 구축

- 공정경쟁 규범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
-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
-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반칙행위는 엄중 제재
- 기업의 절차적 권리는 보장하고 공정위 내부역량은 강화



23년 핵심추진과제

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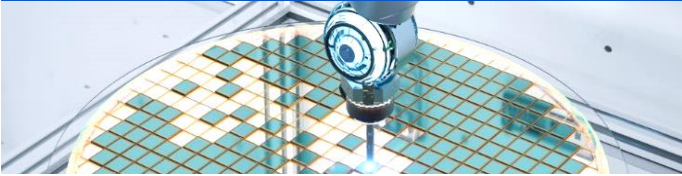
핵심추진과제 

#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

# 경쟁 촉진을 통한 디지털 시장 혁신 제고

##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행위 시정

### 반도체, 앱마켓, 3D 프린터



- 경쟁사업자 진입을 막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중점 점검

### 모빌리티, 오픈마켓



- 자사상품우대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전이, 경쟁플랫폼 사업방해 행위 차단

## 혁신을 가로막는 M&A 면밀 심사

### 게임 · 클라우드



- 전후방 파급효과, 소비자 후생 종합 고려하여 균형있게 심사

### 신고 · 심사기준 개선



- 빅테크 기업의 M&A는 원칙 일반심사, 혁신 소기업 인수 관련 실태파악

## 효과적 규율체계 마련

### 국제협력 강화



-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 공동 대응, EU 디지털시장법 시행에 따른 국내시장 차별 방지

### 법제개선 필요성 검토



- 내·외부 전문가 TF 구성 플랫폼 특유의 독점력 남용행위 유형 보완 등



#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

##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

### 독과점 시장 경쟁 촉진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자동차 수리 부품시장   | 독립·중소 부품사들의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   |
|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 | 대리점 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(現 15%) 확대 |
| 농수산물 도매시장     |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요건 법제화          |

### 국민생활 불편, 사업제한 규제개선



가스

소비자 계량기 선택권 보장

## 중소벤처 경쟁력 관련 규제 완화

### 비금융지주사 CVC 보유 허용범위 확대



### 산학연협력기술지주 계열편입 유예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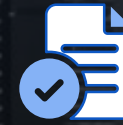


###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제외 요건완화



## 사업재편 M&A 규제 개선

### 경쟁제한성 낮은 M&A 신고면제



- 모자회사 간 합병, 사모펀드 (PEF) 설립 등

### 경쟁제한적 M&A에 대한 자율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



# 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 근절

## 담합행위 엄정 대응



민생

- 에너지, 가정용품, 통신장비, APT 유지보수 등



중간재

- 건설분야 원부자재, 산업용 부품·소재·장비 등



플랫폼

-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사업 방해 등

## 공공부문 입찰담합 방지 제도개선



### 발주기관 임직원 관여방지

- 14개 기관(내, 한전 등) 협의  
→ 인사감사규정 보완, 제보 시스템 운영 등



### 입찰자료 협조대상 확대



### 계약제도 개선 추진

- 실질적 지배관계 업체 간 입찰담합 사전 방지

## 불공정거래행위 엄정 대응



콘텐츠

- 웹소설** 2차 저작물 작성권 제공 강요
- 음악저작권** 신규 사업자 진입 방해
- OTT** 거래구조·불공정관행 전반 점검
- 연예기획사**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



여가·건강

- 레저용품** 병행수입 관련 불공정행위
- 숙박업** 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 등
- 제약의료기기** 불법 리베이트 제공





# 2

핵심추진과제 

## 중소기업,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

# 중소기업에 대한 **정당한 대가 보장**

## 납품단가 연동제 **법제화**

- 연동기준 · 계약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제시 (하도급법 시행령 등 개정)

- 적용 예외조항 악용 시 탈법행위로 엄중 제재

### 연동제 적용 예외

- ① 소액계약(1억원 이하)
- ② 단기계약(90일 이내)
- ③ 원사업자가 소기업
- ④ 당사자 합의 시

## 납품단가 연동제 **자율운영**

- '22년 12월 기준 추진 성과

### 참여기업수

**총 388 개사 참여 중**  
대기업 47개사, 중소기업 341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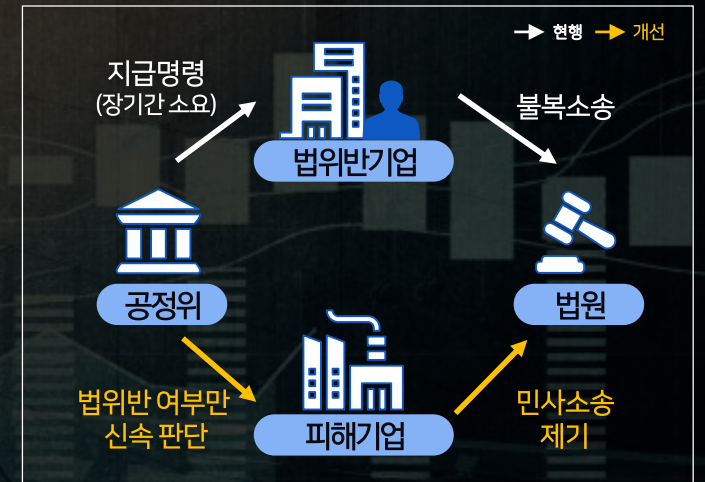
- 참여 확산 추진

- 연동제 성과 점검 → 우수기업 선정 → 범정부적 인센티브 제공 등

- 수평** 대기업 추가 참여
- 수직** 2, 3차 협력업체 확산

##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 유도

- 소송을 통한 구제가 피해기업에 유리 시 범위반 여부만 신속 판단



- 중소기업 자금수요가 물리는 명절 기간 『하도급신속 대응반』 가동



#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

## 용역 하도급 및 뿌리산업 분야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

### SW · 콘텐츠 등



- SW(SI, 클라우드, 게임 등), 콘텐츠(드라마, 영화 등) 및 광고 등
- 구두계약, 부당특약, 대금지급 지연 등 점검

### 뿌리산업



- 6대 기반 공정(주조, 용접 등), 8대 차세대 공정(정밀가공, 센서 등)
- 부당대금결정, 설계변경비 미지급 등 점검

##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유용 근절

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액('17~'21) : 2,800억

✓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더 심각



### 법위반 감시

- 자동차부품
- 에너지
- 기계업종



### 제도개선

- 징벌적 손해배상  
한도 상향
- 손해액 산정  
추정기준 도입



### 계약문화

- 비밀유지계약  
체결 실태점검

#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

## 가맹점주의 과도한 비용부담 완화

### 필수품목



- 과도한 부담 방지를 위해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
- 외식업 중심 구입강제 등 집중 점검

### 정보공개



- 정보공개서 체계 전면 개편
- 정보공개서 심사기간 단축

## 납품업체 · 대리점주의 고충 해소

### 유통



### 경영간섭행위 금지

- 다른 유통채널의 판매 가격 인상 요구



### 아울렛 · 전문판매점 범위반 감시

- 판촉비용전가, 배타적 거래요구 등

### 대리점



###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설립 · 운영

- 영세점주 고충처리, 법률서비스 제공

## 플랫폼-입점업체 간 상생지원

### 자율규제 유도



- 현행법상 규율이 어려운 관행 개선

### 오픈마켓 · 배달앱(1/4분기)



- 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방안 도출
- 인센티브 및 이행확보 방안 마련

### 숙박앱 · 앱마켓으로 확산





# 3

핵심추진과제 

##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

#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

##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 집중감시



### 편법적 지배력 승계

- ✓ 경영권 승계 목적 총수 2세 지배회사 부당지원 등



### 중소기업 경쟁기반 침해

- ✓ 부당지원 기반으로 중소기업 시장 잠식 등



### 부실 계열사 지원

- ✓ 동반부실 우려 있는 한계기업에 부당지원 등



### 부당내부거래 우회수단 점검

- ✓ TRS 등 금융상품 실태 점검 및 규율방안 검토

## 부당내부거래 규율의 투명성 제고

###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



사익편취 부당성 판단기준, 예외사유 등 합리적 정비

- ✓ 총수일가로의 부의 이전가능성, 판례·이해관계자 의견 등 검토

### 모자회사 관련 규제개선




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적용범위 합리화 추진

- ✓ 경제적 동일체로서의 성격, 규제 적용배제시 문제점 등 고려



#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

##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

 공시집단 지정기준 합리적 조정


- 경제규모 증가, 상출집단 지정기준과 정합성 고려

현행

자산 5조원


개선

GDP 연동 또는 기준금액 조정

 동일인 기준 관련 지침 제정

-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(변경) 절차 명문화

## 공시제도 개선

 내부거래 공시 대상 정비


- 공시대상 기준금액 상향 및 소규모 내부거래 제외

현행

50억↑or 자본금 5%↑

개선

100억↑or 자본금 5%↑ (5억 미만 제외)

 집단현황 등 공시항목 주기 조정

- 효용성이 낮은 항목 정비, 공시주기 합리적 조정

## 기업집단정책 네트워크 구축 · 운영



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과제 발굴 및 논의를 위해 학계, 법조계, 이해관계자 등 참여

- 금산분리 제도, 지주회사 제도 등 중장기 발전방향도 모색



23년 핵심추진과제

핵심추진과제 

# 4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



#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소비환경 조성

##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

### 뒷광고·후기조작 등



- 중소 입점업체 중심 뒷광고, 이용후기 조작 점검·시정

중점점검  보건·위생용품, 식료·기호품 등

### 눈속임 상술



-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 마련

예  별도 고지없이 서비스 자동결제,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

### 정보조작



- 트래픽어부징을 통한 순위조작, 게임업체 확률조작 등 점검

## C2C의 소비자 피해 방지



### 자율적 피해예방·분쟁해결방안 마련

- 중고거래, 리셀 등 C2C 사업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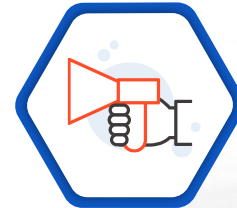


### 전자상거래법 적극 집행

- 사업자 성격이 명확한 판매자 대상

## 온라인 소비자 피해예방 제도개선

### 임시중지명령 활성화



- 동시다발 소비자 피해 확산 신속차단
-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

### 집단분쟁조정 활성화



- 다수 피해 예상 시에도 신청 허용

현행  
50명 이상  
피해

개선  
50명 이상  
피해 명백히 예상

# 일상생활 속 소비자 안전과 권익 보호

## 안전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

### '소비자안전기본법' 제정



- 정책조정을 위한 '민관 합동 소비자안전위원회' 구성
- 위해정보 수집, 위해제품 수거·파기 등 조치 강화

### 안전책임 강화를 위한 표시·광고 제도 개선



- 그린워싱(Green washing) 세부 판단기준 마련
- '인체무해' 등 광고에 대한 엄밀한 입증책임 부과 추진

## 수요 급증 분야 불공정약관 점검

### 온라인 서비스



| 업종                | 중점 점검대상 약관조항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독서비스<br>(오디오북 등) | 무료체험 후 고지없이 유료 전환,<br>서비스 제공 관련 면책 |
| 라이브<br>커머스        | 중개 관련 면책, 이용자 콘텐츠·<br>저작물에 대한 활용범위 |

### 여행, 숙박



- 환불·면책 관련 조항 시정 및 중소업자 대상 교육 강화

### 공유오피스, 리셀(resell)



- 중도해지 제한, 재판매금지 등 약관 불공정성 점검

## 피해 빈발업종 불공정행위 점검

### 스마트폰·오픈마켓



- 과장광고 중점 감시

### 아이돌 굿즈·완구



- 온라인 시장의 구매취소 방해 등 점검

### 유사투자자문업



- 범위반 집중점검 및 분쟁해결기준 마련





국민과 시장의 눈높이에 맞춘

# 법집행 혁신

# 법집행 시스템 개선

## 사건처리 절차·기준 정비

 조사관행 개선

- 조사 범위의 예측가능성 제고
- 조사공문 구체화, 이의제기 절차 신설, 준법부서 조사기준 마련

 조사·심의 제도 정비

- 피조사기업의 방어권 강화
-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, 변론기회 확대, 사건조회기능 개선

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

- 장기사건 집중관리,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활성화 등

## 사건처리 역량강화

 사건기록관리 고도화

- 부서장 차원의 기록물 관리 강화
- 기록물 편철시스템 개선 등

 조사역량 강화

- 조사절차준수, 기록물 관리 및 심의 대응 등 교육프로그램 혁신

## 조직개편



### 조사 - 정책 부서 분리

- 사무처장 정책기능, 조사관리관(1급 신설) 조사기능 전담 운영
- 사건처리에 대한 관리·책임성 강화, 분야별 전문성·효율성 제고







### 조사 - 심의 분리 강화

- 조사·심판 부서 간 인사이동 제한, 근무공간 분리







# 법집행 시스템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

## Before

-  조사범위와 대상에 대한 불만
  - ✓ 조사범위 불명확, 준법지원부서 우선 조사 등
-  불충분한 소명 기회
  - ✓ 1회로 심의 종결, 조사 진행상황 파악 곤란 등
-  사건처리 지연
  - ✓ 피해구제가 지연되고 법적안정성이 저해된다는 비판
-  신규·기존 직원 간 조사역량 차이
  - ✓ 조사기법·법규에 대한 숙지 수준 차이로 국민신뢰 저하

## After

- 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 명확화
  - ✓ 공문적시 범위 내 조사, 준법지원부서 조사 기준 마련
-  1심 기능에 걸맞는 절차적 권리 보장
  - ✓ 의견 개진 기회 확대, 피조사인에게 진행상황 상세 공개
-  장기사건, 시효임박사건 등 감축
  - ✓ 사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처리기간 단축
-  전직원의 표준적 조사관행 정착
  - ✓ 교육강화 및 모범적인 관행 정착

A futuristic cityscape at night, viewed from an elevated perspective. The city is illuminated with warm yellow and orange lights, contrasting with the deep blue of the twilight sky. A prominent feature is a glowing blue network overlay that consists of numerous nodes and connecting lines, resembling a data or communication network. This network is superimposed over the city's buildings and streets. In the upper portion of the image, a large, semi-transparent sphere is visible, composed of a grid of lines and small glowing points, suggesting a global or digital sphere. The overall aesthetic is high-tech and digital.

감사합니다